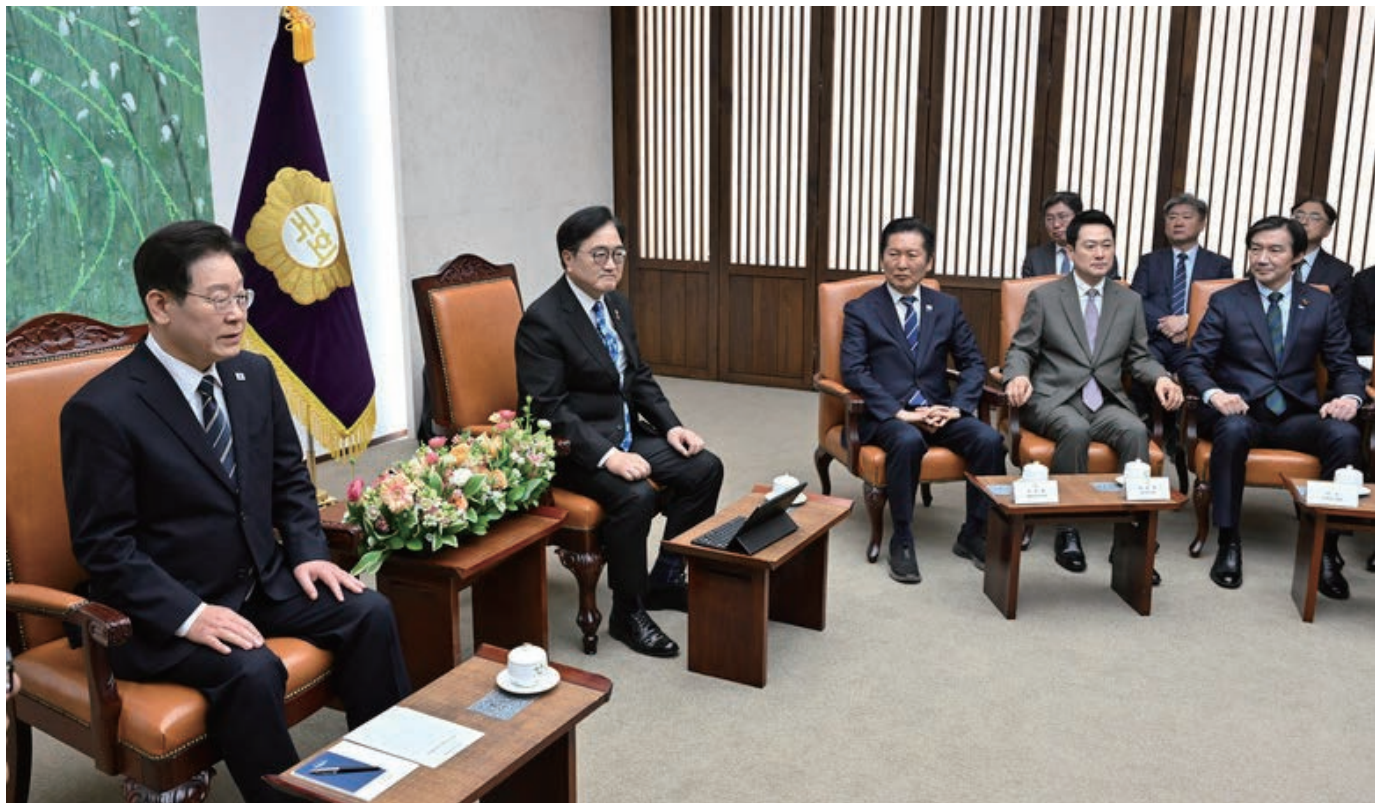


이재명대통령 "이번 위기는 소나기 아닌 폭풍우...비상한 대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장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국민의힘 정동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창래 대표, 우 의장, 이 대통령. 2026.4.2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지금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시장연설에서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나도 이전 같은 원활한 에너지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통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

민생경제 전시상황, 매점매석 무관용...에너지 절약 동참해달라"

"춘음 아껴 편성한 '방파제 추경'...신속히 통과되도록 초당적 협력 부탁"

"빛 없는 추경,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피해지원금으로 서민 숨통 틈을 것"

라며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우선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된 힘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과 같은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다. 신속히 통과되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총정으로 정부와 국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10만~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고유가·고물가로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의 숨통을 틈여드릴 것"이라며 "지원금은 지역화 페로 지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해 먹을 것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도 4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늘려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핵심자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석유 등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7천억원의 투입할 것"이라며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

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수동적인 대응에만 그치지 말고 에너지 전환에 더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용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빛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춘음을 아껴가며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직접 설명해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빠른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심규명 기자

"애 감기약 어떻게 먹이라고"...'물약통'까지 중동發 대란 조짐

약국들 "주문 막혀 막막, 판매도 못 해"...일상 의료용품 품귀 현상

與을지리우, 대기업·플라스틱업계와 상생협력 회의 진행

"약사님께 부탁드려 겨울 플라스틱 약통 하나를 받으습시다. 약통까지 이럴 줄은 몰랐네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양모(42)씨는 2일 오전 딸의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 갔다가 적잖이 당황했다.

약국에서 중동사태 이후 플라스틱 약통 수급이 어려워졌으며 약통을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양씨는 "아이 감기약은 계속 먹여야 하는데 걱정된다"며 "전쟁 여파가 여기까지 미칠지 몰랐다"고 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사태 여파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재 공급이

흔들리면서 일상에서 흔히 쓰는 약통 등 필수 의료 소모품도 직격탄을 맞았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약국은 요청 시 2개까지 제공하던 플라스틱 약통 지급을 최근 하나로 줄였다.

약국 직원은 "약통 주문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며 "소아과 인근 병원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58)씨는 "주변에 소아과가 많아 하루에 보통 약통 100~200개가 나가는 데 3월 말부터 거래처 주문이 막혀 막막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약통 지급이 어

렵다는 공지문을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소 유상으로 추가 약통 구매가 가능했지만 당분간 판매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환자분들께 차분히 설명을 드리지만 간혹 '얼마나 한다고 안 주는 나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며 여러모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병원원과 약국에 납품하는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관계자는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를 배급해주듯 업체들에 나눠주다 보니 원료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사정이 매우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 약 포장지부터 라텍스 장갑, 주사기 등도 일제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료소모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은 전날 안내문을 띄워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폭등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김포의 한 플라스틱 업체는 당분간 약통 판매를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대학병원 역시 수액 백, 변 붕투, 의료용 가운 등 의료용품 전반에서 공급 불안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업종별 석화제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어 보건 의료, 생활필수품 등에 필요한 중요 품목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코너스톤 투자자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일정 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 공모주 일부를 사전 매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재발의했다.

이는 기업공개(IPO) 시 불확실한 수요 예측, 공모주 단타 성향 등으로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자리 잡으면 상장 전 장기투자자를 확보해 IPO를 투기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 자본조달 통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에서다.

정무위는 또 채무조정기구가 가산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 정보를 채무자 동의 없이도 일괄 수집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되, 국회가 해당 특례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 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 규제 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역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정무위는 전날 소위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법안은 공정거래위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재봉 기자

수원특례시

(26년 3월 27일부터)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수원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대상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사업내용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주거지원
- 일상생활돌봄
- 스마트 안부확인
- 가족지원

* 개인별 상황(건강·소득·재산 등)에 따라 서비스 종류, 내용 조정될 수 있음

신청·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